



1만여명 촛불 추모

28일 밤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명복을 빌고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盧前 대통령 오늘 국민장

경복궁서 영결식...광주·전남 등 전국 추모열기 절정

▶관련기사 2·3·4·6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國民葬)으로 염수된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오전 5시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밭인식 이후 서울로 운구돼 영결식과 서울광장 노제를 거쳐 수원 연희장에서 화장되고 나서 봉하마을의 사찰인 정도원에 안치됐다가 49제가 끝난 뒤 봉하마을에 안장된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집행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장 집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영결식은 29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5시께 봉하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밤인식을 치른 운구차량 행렬이 고속도로를 거쳐 오전 11시께 경복궁 영결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된다.

영결식이 끝난 후 운구 행렬은 서울광장으로 이동, 오후 1시부터 약 30분간 노제를 지낸 뒤 오후 3시께 수원 연희장에 도착, 화장식을 치르고 밤 9시께 봉하마을로 옮겨져 봉화산 정도원에 안장된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집행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장 집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된다.

이에 앞서 영결식 하루 전인 28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선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앞 광장을 비롯, 여수와 순천, 목포, 광양, 나주 등에서 추모제가 일제히 개최됐다.

전남은 목포역 광장과 여수시 여수동, 순천 조은프라자 앞, 나주농민회 사무실 앞, 광양시청 등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려 노 전 대통령의 널을 기렸다.

또 서울·부산·대전·청주·원주 등 전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제가 개최돼 고인을 애도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를 북돋웠다. 또 추모위의 요청에 의해 이날 광주 도심은 밤 8시55분부터 5분간 소등의 시간과 함께 '촛불 추모 행사'가 열렸다.

전남은 목포역 광장과 여수시 여수동, 순천 조은프라자 앞, 나주농민회 사무실 앞, 광양시청 등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려 노 전 대통령의 널을 기렸다.

또 서울·부산·대전·청주·원주 등 전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제가 개최돼 고인을 애도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치콘이 격상되면 감시자산과 항공장찰 등의 정보 수집자산, 분석 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은 U-2 고공 전략점찰기와 RP-4 정찰기 등의 대북 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거 증강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 대북 '워치콘' 2단계로 격상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 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8일 오전 7시15분부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했다. <관련기사 5면>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위험

이 심각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분석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 상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워치콘 2단계 상황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그러나 군은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은 평시 수준인 4

## "정부, 지자체 포괄 감사는 위헌" 결정

현재 전원재판부

정기감사 존폐 논란

현법재판소가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감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지자체 감독 기능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합동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현법재판소의 결정은 현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이날 현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단서 조항에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이날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현법재판소 결정으로 향후 지자체 감사 때 적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감사 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즉, 정부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현행 방식대로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현재의 포괄적인 감사 방식에서 위법 또는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무를 선택해 집중 감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 사업이 정부 보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

으로 감사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업무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단체 자체감사와 함께 정부의 합동감사까지 실시돼도 지자체 곳곳에서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건이 터지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치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주요 사업을 대부분이 정부 보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가 감사대상이고 암밀해 따지면 자치단체 고유사무는 인사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향후 자치단체 사무감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자치단체 감사 업무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약속드립니다

드래곤 웨딩컨설팅

